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제4차 산업혁명과 문화정책: 진단과 처방

[발제자] 박광무 한반도선진화재단 문화관광정책연구회장

[지정토론자] 김휘정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대학 예술경영학과 방문교수
윤주한 내일을위한오늘 기획위원

[일 시] 2019년 6월 20일(목) 오전 07시 30분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문자 후원

#7079-4545

제317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1990년에 문화부가 창설되면서 문화정책의 틀이 마련되었다. 2013년에 좌우를 넘어 범문화계의 참여로 문화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 정책을 발표했다.

- 국민의 문화누림 실태를 보면 표면적인 국민의 문화예술관람율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내용면에서는 영화 관람과 대중문화에 과도하게 편중되어있다. 세대별로는 1030세대에 편중되어 있다. 문화 향수권을 넓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문화자원봉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것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위원구성과 핵심주관부처와 협력부처에 문화체육관광분야는 없다. 기술과 산업측면에서 4차산업혁명을 강조하다보니 인문학적 문화적인 면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 문화정책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 문화정책의 주체로서 정부의 역할은 축소하고 문화계와 연관기업 및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증대하는 거버넌스 구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문화진흥기관의 조직과 예산구조를 5G 초연결사회의 전개에 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문화예술관련 법제도와 정책 역시 4차산업혁명에 부응해야 하며 문화예술의 새로운 창작 방식과 향유 형태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문화정책의 주요 경과

- ◆ 건국시기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 문화정책이 실시되었다. 이후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민족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한 문화정책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 ◆ 1990년에 문화부가 신설되면서 정부주도형의 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펼쳐졌다. 초대 이어령 문화부장관이 현재적 의미의 문화정책의 틀을 기초하였다. 이후 이창동 장관이 21세기버전 문화정책을 수립했으나 곧 교체되면서 실현되지 못했다.
- ◆ 이후 2013년에 좌우를 넘어 범문화계의 참여로 문화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정책을 발표하였다.

◆ 국민 문화누림 실태

- ◆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수준 상승에도 불구하고 OECD가 발표하는 ‘보다 나은 삶의 지수’는 하락하는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3년 25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7년에는 38개국 중에서 29위로 나타났다.

- ◆ 국민의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의하면 문화예술관람율이 2003년 62.4%에서 2018년 81.5%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명 중 80명 정도는 문화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낮은 수준은 아니다.
- ◆ 2018년 영화관람이 75.8%로 압도적으로 많고 대중음악이 21.1%로 그 다음으로 많다. 반면에 연극, 미술전시, 뮤지컬은 각각 13~15%, 전통예술, 서양음악, 문학, 무용 등은 각각 1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예술의 향수가 너무 편중되어있는 것을 보여준다.
- ◆ 세대별 문화누림 현상도 1030세대는 각각 91.6%, 97.1%로 높게 나타났으나 40대는 89%, 50대는 79.4% 60대는 64.7%로 세대가 높아질수록 문화누림이 낮아진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50대 이후 세대가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 ◆ 국민의 문화자원봉사 경험율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 이는 국민의 문화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모두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으로 문화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요구된다.

◆ 문화 정책의 문제점

- ◆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현황을 보면 위원회 구성과 핵심주관부처와 협력부처, 정책방향 설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분야는 없다. 이는 현 정부가 4차산업혁명을 기술과 산업으로 보다보니 나타난 현상이다. 사람중심의 정책을 주장하면서도 인문학적 문화적 정책접근이 부재한 모순을 보여준다.
- ◆ 현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에 있다.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의 기본원리와 3대 방향 9대 실천의제로 구성되어 있다.
- ◆ 그러나 캐치프레이즈 또는 비전과 실제 간에 괴리가 있다. 관련 정책 간 연계는 물론 정책전반의 균형감과 실효성이 의문스럽다. 지나친 전 정부 정책지우기와 적폐청산 때문이다. 소액다건 위주의 지원 사업 역시 창의성을 제약하고 왜곡할

우려도 있다.

- ◆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에 문화정책이 포함된 것은 자율, 창의, 다양성이라는 문화비전 2030의 3대 기본원리와 충돌된다. 또한 미래형 정책 비전보다는 과거청산에 몰두함으로써 스스로 문화정책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 4차산업혁명과 문화정책의 방향

- ◆ 4차산업혁명시대의 문화정책은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 융합되어 인간의 행복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인의 재능 및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 ◆ 따라서 국가주도 문화정책의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 문화정책의 주체로서 정부의 역할은 축소하고 문화계와 연관기업 및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증대하는 거버넌스 구도의 확립이 요구된다.
- ◆ 4차산업혁명의 기제와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문화진흥기관의 조직과 예산구조를 5G 초연결사회의 전개에 따른 대응체제로 전환해야한다. 법제도와 정책 또한 과학기술과 초연결사회의 4차산업혁명의 흐름에 부응한 문화예술의 새로운 창작 방식과 향유 형태의 등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되고 다양화 되어야 한다.
- ◆ 민간의 자율성이 최대한 살아나는 구도로 진흥과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종사자와 매개자에 대한 지원은 창의와 경쟁을 권장하는 풍토로 일대전환이 요구되고 나아가 공정거래와 공정경쟁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
- ◆ 문화향유자에 대한 지원은 수요자 비용부담원칙이 적용되어야하고 개인과 기업의 기부문화를 유발하는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

◎ 지정토론자의 토론

김희정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대학 예술경영학과 방문교수

- ◆ 문화정책이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나 향유자 중심의 소비정책으로 변화되면서 문화예술 창작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고 있다. 문화컨텐츠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체는 창작자, 기획자, 벤처기업임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지원정책은 크리에이티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 새로운 예술장르가 등장하고 있지만 현재 법규제로는 미래예술장르를 담아내지 못한다. 미래지향적 정책마련과 법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어야한다. 근본적으로 문화거버넌스를 개혁해야한다. 중앙과 지역, 민간과 관과의 공유거버넌스의 수립이 필요하다.

윤주한 내일을위한오늘 기획위원

- ◆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에 대한 정책은 달라야 한다. 현재 대중문화 정책은 ‘대중문화 키우기’라는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조직과 스크린쿼터제가 한국영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문화산업은 다른 산업의 지원정책과는 달라야한다. 왜냐하면 문화는 삶의 양식과 가치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문화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원정책보다는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냅두기’ 정책이 필요하다.
- ◆ 고급문화는 상황이 다르다. 고급문화 키우기 정책이 필요하다. 지원방식도 예술가에 대한 직접적 복지적 차원의 지원보다는 편향적이지 않는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잠재적 고급문화 감상자를 육성하여 미래의 고급문화 수요자를 양성하고 우수한 문화적 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을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질의 및 응답

질문1)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문화 분야가 배제된 이유와 글로벌 경제에서 문화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답변1) 처음 입안 때부터 배제되었다. 2기위원회가 출범되었지만 문화관련 인사가

한명도 없다. 정부가 4차산업혁명을 너무 기술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차산업혁명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한국의 기업과 문화체육인들이 글로벌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